

G-Welfare Weekly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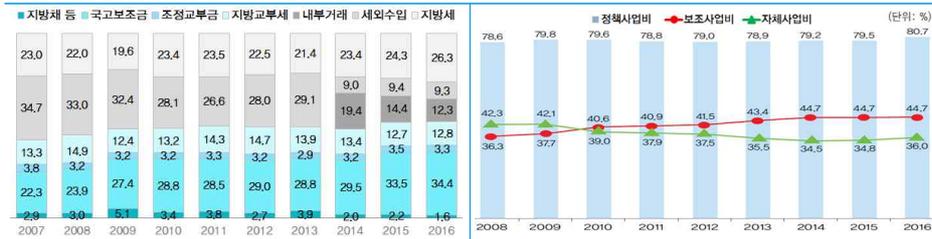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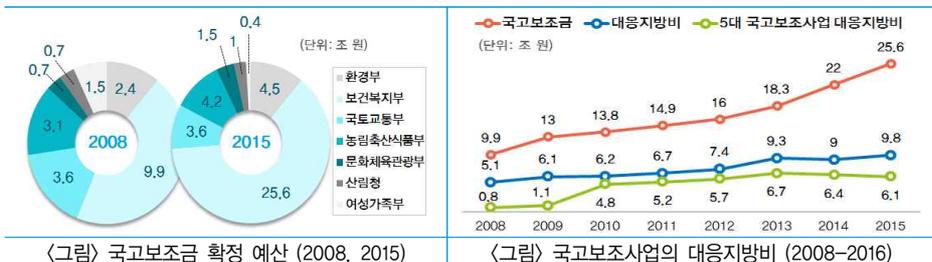
1.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경기도 시사점

01 국고보조사업 현황*

-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국고보조금**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앙의존형 재정구조 및 자체사업 축소로 변화되고 있음
 - 국고보조금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, 2007년 전체 지방세입의 22.3%를 차지하고 있던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2016년 34.4%로 증가하여 중앙의존형 재정구조로 변화됨
 -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보조사업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. 2008년 36.3%였던 국고보조사업비가 2016년에 44.7%로 증가하였고, 2008년에 42.3%였던 자체사업비가 2016년에는 36.0%로 감소



- 부서별로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
 -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*** 대응지방비는 2008년 0.8조원에서 2015년 6.1조로 7.7배 증가



02 경기도 시사점

- 복지영역의 국가책무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구분한 사회정책 재설계 필요
 -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지방대응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5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여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임. 복지선진국과 같이 연금과 수당은 국가의 책무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업 재설계 필요
-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신설 결정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제도화
 - 현재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신설 방식에서 제도 신설시 국고보조사업비 분담체계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

*국회입법조사처 (2017.1.12.) 자료로 보는 이슈
 **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대응지방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, 특정목적에만 사용하는 특장제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

***기초연금, 양육수당, 장애인연금, 영유아보육, 기초생활보장

2. 행정자치부 2017년 업무계획

중앙부처의 2017년 업무 계획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코너로,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이번 주에는 행정자치부의 2017년 업무계획을 살펴보고자 함

- 행정자치부는 '국민 맞춤형 정부,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' 구현 업무계획 발표

국민 맞춤형 정부,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	
국민 생활 속 정부 3.0 실현	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②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 효율화 ③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
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조직관리	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직관리 ②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 인력 운영 ③ 안정적인 정부운영 지원
미래 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	① 인공지능형 전자정부 기반 구축 ② 하나로 연결된 정부, 「One-Government」 구현 ③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 강화 ④ 행정한류의 글로벌 확산
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	①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 ② 지방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③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⑤ 지역사회 통합·상생모델 정착
지방재정 안정과 지역성장 동력 강화	① 지방재정의 건전성·투명성 강화 ②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편의 향상 ③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 ④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

-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정부 3.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
 - 전입신고 시 한번 신청으로 각종 주소지(카드, 은행, 보험, 통신사 등)가 변경되는 이사 서비스
 - 「다문화이주민+센터」 신설하여 다문화가정, 외국인 지원서비스 종합제공(다문화가족지원센터(여가부), 외국인력지원센터(고용부), 사회통합프로그램(법무부), 외국인지원센터(지자체))
 - 개인 스마트폰으로 '챗봇*'을 활용한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시범 제공
 - 학교 전입학 시 서류(주민등록등본, 출입국사실증명 등)제출 없이 학교에서 직업 확인
- 저출산·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선제적 대비
 -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,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(거점마을 조성,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화, 민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, 도시이주 청년 지원을 위한 '지역희망뿌리단' 구성)
 -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, 고향희망심기 사업(고향에 대한 봉사 기부)
- 4차 산업혁명 시대 「지능형 전자정부」 구현
 - 지능형 전자정부 '10대 사업' 선정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,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
 -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「One-Government」 구현
-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이상 확대
 - 치안·안전(3,600명), 교육(630명), 복지(2,300명) 등 현장 중심 인력 1만 명 이상 증원·배치
 - 일·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'시간선택제' 직위 100개 이상 대폭 확대
-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
 - 지방재정체계 수립 '페이그' 원칙 확립,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시스템 구축
 -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·지원

*정해진 응답 규칙(Rule)에 따라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 가상의 대화상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셜 커머스,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

02 경기도 시사점

- 가평·양평 등 경기도 인구소멸예상 지역에 정부정책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 전개
- 지방재정 활용의 건전성·투명성 강화 기조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에 사회단체·법인·시설에 대한 재정 관리감독 매뉴얼 및 교육 지원
- 경기도 차원에서 구현하는 복지 플랫폼 「Wel-formation」 과 정부3.0 연계서비스 확대

02

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 현황

행정자치부가 2017년 주요업무로 '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'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 중 7곳이 인구소멸 위험 또는 경고 지역으로 나타남

-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3.1%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
 - 마스다 히로야의 '지방(인구)소멸'* 측정지표 중 '20~39세 여성인구 비중'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, 지난 11년 동안(2004년~2015년) 20세~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3.4%가 감소
 - 20세~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지수가 1.0 이하인 경우, 그 폭이 크면 클 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이 크다고 분석
 - 20세~39세 여성인구와 65세 노인인구의 상대지수가 1.5 이상이면 '양호', 1.0~1.5 수준이면 '보통', 0.5~1.0 수준이면 '경고', 0.5미만은 '위험'으로 분류
- 한국은 2016년에 인구 소멸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으나, 속도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빠름
 - 일본은 1976년에 두 지표 간 상대지수가 2.0이었는데, 1992년 1.0으로 떨어지는데 16년 소요
 - 미국은 1970~1988년까지 1.4를 유지하다가 2009년 1.0으로 0.4가 떨어지는데 21년 소요
- 경기도의 2015년 인구소멸 수준은 1.4이나, 2022년 인구소멸 수준은 0.9로 '역전 발생'
 - 2015년 기준 도내에서 연천·가평·양평은 20세~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지수가 0.5 미만으로 인구소멸 '위험'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,**
 - 포천·동두천·여주·안성은 0.5~1.0 수준으로 인구소멸 '경고' 지역에 해당

*소수의 대도시만 생존하는 '극점사회'를 의미

**전국 228개 지역 중 77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

***자료: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(1993~2015년), 장래인구추계현황(2016~2025년)

〈표〉 경기도 출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비중의 변화***



- 경기도는 지방(인구)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-지역-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
 - 경기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과 지방(인구)소멸의 대안을 연계하여 사군별 전략과제 고도화 과정 등 후속조치 진행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행사명	주요내용
"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" 공청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 시 : 2017. 1. 24.(화) 14:00~16:00 • 장 소 :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• 내 용 : 연구용역 주요내용 발표 및 토론 • 참 석 : 경기도, 도의회, 도내 장애인단체 등 약 50명

03 FACT CHE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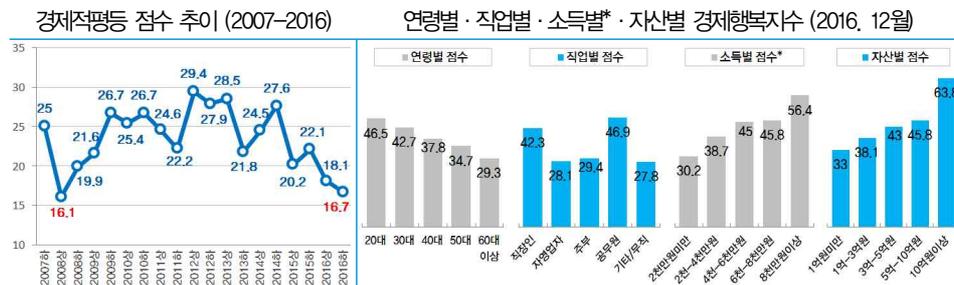
지방보조금, 회계관리시스템으로 투명성 제고될 수 있나?

- 정부는 지방보조금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「지방보조금 회계관리시스템」 구축을 추진
 - 지자체에서 각종 법인 및 단체(사회복지법인, 새마을 지회, 체육회, 노인회 등 각종 협의회와 법인 등)에 지원하는 보조금, 위탁금,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
- 지방보조금에 대한 임의·변칙사용 문제는 오랫동안 미해결과제로 지적되어 왔음
 -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지침이 존재하나, 실제 이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
 - 제도허점이나 편법적 수단을 활용한 임의·변칙사용 사례 발생
 - 예를 들어 ①호봉수를 시설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경력을 과소 또는 과다산정하거나, ②생계비를 운영비(난방비)로 지정용도 외 사용한 사례, ③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미지급되는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 등*
-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외에도, 보조금 지급 시설에 대한 회계 기준 적용,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개선·회계관리 교육 실시, 편법적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채널 필요
 -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윤리교육, 재무회계 교육 등을 경기도에서 적극 수행
 - 보조금의 임의·변칙사용이 의도적·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시설의 경우 폐쇄 등 강제조치와 적극적 제도운영으로 투명한 시설운영 문화 조성

*실제 지난 '16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특장감사 결과 18개 시설 총 2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. 이 가운데 재정상 조치로 총 2억389만220원을 회수 조치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2016 하반기 경제행복지수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(2017), 「현안과 과제」 17-1호

-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「제19회 경제행복지수」 조사 결과, 2016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경제행복지수는 38.4점으로 5년 만에 최저치 기록**
 - 구성 항목 중 경제적안정(53.3점)·경제적우위(51.4점)·경제적발전(46.2점)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으나 경제적평등은 16.7점으로 역대 최저수준
- 연령이 낮을수록, 공무원일수록, 그리고 소득과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고,
 -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, 자영업자일수록, 소득과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행복지수도 낮음
-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20대는 '일자리 부족', 30대는 '주택문제', 40대는 '자녀교육문제',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'노후준비 부족'을 꼽음

*연소득 기준

**매년 2회씩 실시 중이며(상/하반기), 19회 조사는 지난해 12월에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7명 대상으로 실시